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하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병원 점거 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5월 29일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며 폐업을 정당화한다.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금 누수”라는 것이 저들의 사고 방식이다. 환자를 한 명 한 명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정된 노동조건이 저들에게는 파괴해야 할 “기득권”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돈 쓸 생각이 없고, ‘돈보다 생명’이라는 노동자들은 끝 보기 싫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준표는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사망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대화 기간’ 내내 노동자들의 백기투항만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노동자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일부 받아들이자, 오히려 더 기가 살아서 폐업을 밀어붙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다. 물론 이들은 그동안 감히 노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장하지 못했고 지금도 ‘유감’ 운운하며 위선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홍준표의 범죄를 묵인·방조해 왔다.

공공의료와 민주노조를 공격하려는 데서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영리병원 설립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철도·가스·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밀어붙이려 한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공성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려면 우리도 단호하고 과감하게 싸워야 한다.

보다 재벌의 돈벌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갈수록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설 ‘강성노조’를 배제하고 제거하고 싶어 하는 점도 홍준표와 일치한다.

공범들

따라서 우리는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옹호하면서 홍준표와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여론은 여전히 공공의료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편이며 박근혜 정부도 거둬들인 악재와 위기에서 헤매고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하고 연대도 더 확산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진주의료원을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투사들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을 점거하면서 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홍준표가 병원 집기와 의료장비를 빼내 물리적으로 청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점거 농성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홍준표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을 감히 끌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도 계속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해서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한 지방도시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을 살리고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공공의료 확대를 바라는 광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홍준표의 폐업 선언을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의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리자.

왜 국정조사에 기대지 말고 국립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밝힐 필요도 없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은 너무나 명백한데 말이다.

홍준표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으며 공공병원을 문닫으려 했다. 복지 공약들을 ‘먹튀’하던 박근혜는 이런 홍준표의 패악질을 도와줬다. 이것이 지난 세 달간 우리 눈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이다.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이유는 뻔하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도 의도가 드러난다. 진실과 책임을 몰타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려는 것이다. 심지어 ‘적자’, ‘강성노조’를 문제삼으며 공공의료 공격의 빌미를 찾으려 할 것이다.

국정조사가 홍준표를 물러서게 할 가능성도 없다. 이 자는 진주의료원 폐쇄는 “과거지사”라며 국정조사에 응할 생각도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도 업무개시명령 등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조차 쓸 생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민주당은 또다시 꾀죄죄한 본질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투쟁 초기부터 ‘폐업을 막으려면 재정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발목을 잡아 왔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 진영은 국정



정부가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을 내쫓고 있는 '세금 누수'를 줄였다고 좋아하는 것이 이 사태의 진상이다.

조사에 기대를 걸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투쟁 건설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지금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확대할 때다.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가 당장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나라의 형편없는 공공의료 수준을 정상화하려

면 국립병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며 박근혜조차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국립화가 지금 필요한 요구이다.

국유화 요구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의 정치적 성격을 밝히 드러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우리편의 단결과 운동의 발전을 고무할 수 있다.

산별 파업을 해야 할 때다

물론 박근혜는 이런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다.

그 점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이 삭발을 하며 “동맹파업”을 결의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런 결의는 신속하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산별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홍준표와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조직 노동자들이 힘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공공의료와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흘

려보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 파업을 감히 ‘강성노조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하기 힘들 것이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싸운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도 “너무 공중전만 하는 것 아니냐.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당장 강원도와 전라도에서도 지방의료를 폐업하거나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더 커지지 못하도록, 투쟁

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파업을 한다면 공공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정치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박근혜도 더 모르쇠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민영화 · 시장화에 맞서 싸우는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적극 연대에 나서야 하고, 특히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조도 함께 투쟁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을 국립화하라고 요구하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자 투쟁 지지 기사가 실린

레프트21

106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